

독 일

- FY2012 : 2012년 1월 ~ 2012년 12월

- 2012년도 독일 예산안 :
 - 2011년 3월 16일 예산편성지침 내각 결의
 - 2011년 7월 6일 정부 2012년 예산안 및 2011-2015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 2011년 9월 6일 의회 심의 시작
 - 2011년 11월 25일 하원 통과

- 출처 :
 - Bundeshaushalt 2012, Finanzplan des Bundes 2011 bis 2015 (2011.7)
 - Monatsbericht des BMF (2011. 12)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www.bmas.de)
 - Statistisches Bundesamt (www.destatis.de)
 -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2011. 12)
 -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2011.11)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9)
 - OECD, Economic Outlook (2010.11)
 -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ww.cesifo-group.de)
 - Kiel Institute (www.ifw-kiel.de)
 -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deu.mofat.go.kr)
 - KOTRA (www.globalwindow.org)

- 환율 : 1유로 = 약 1541.42원 (2011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0년 경상GDP 3조 586억 달러(우리나라 2.15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11년 기준 95.1%(우리나라 102.0%)

- 인구 : 8,178만명(2011년 기준)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독일중앙은행 발표 기준 2012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0.6%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 실업률은 7.0%이며 물가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2012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3,062억 유로이며, 신규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2,801억 유로, 신규차입은 약 261억 유로로 전년대비 크게 감소

◇ 예산기조

- 부채제한법에 명시된 GDP 대비 0.35%미만의 신규부채 규모 달성(2016년)을 위해 2011년에 이어 긴축정책을 유지하며, 신규차입 감소를 위해 Top-down 예산 방식을 도입
- 중·소 소득층 중심의 세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성장지향적 측면을 가미하며,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예산안 내용

- 2012년도 신규차입금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하여, 총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
- 총 재정지출은 3,062억 유로로, 전년 대비 0.1% 증가한 규모이며,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41.3%)이 가장 큼

◇ 주요정책

- (재정건전화) 대내적으로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의 제4차 회의 결과, 2012~2016년 적용될 재정 평가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신(新)재정협약 초안이 타결됨
- (에너지정책)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로 연간 약 33억 유로의 수입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원전폐쇄와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할 예정
- (감세) 2013~2014년에 걸쳐 소득세 면세점을 8,354유로로 인상하고 부유세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1.1.13	FY2010 결산 잠정완료	재정동향 5호 참조
2011.2.2	세제간소화법 발표	재정동향 5호 참조
2011.3.2	은행세 관련 법령 개정	재정동향 6호 참조
2011.3.16	FY2012 예산편성 지침 내각 결의	재정동향 6호 참조
2011.4.3	수정된 안정화 프로그램 승인	재정동향 6호 참조
2011.5.30	FY2010 결산 보고서 발표	재정동향 7호 참조
2011.7.6	독일 정부 FY2010 예산안 및 2011-2015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재정동향 7호 참조
2011.7.21	독일 내각 은행세 법령 승인	재정동향 7호 참조
2011.9.6	FY2012 예산 의회 심의 시작	
2011.11.25	FY2012 예산 하원 통과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2012년도 독일경제는 2011년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하락과 실업률 감소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률) 2012년도 독일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2예산안 및 2011~2015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1.8%의 GDP증가를 예상함²¹⁾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중앙은행은 2012년 1% 이하의 GDP 성장률 전망
 - (실업률) 실업률은 2011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 연방정부는 2012년 한해 총 고용인구가 4,13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독일 역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함
 - 2011년 12월 독일 실업률은 20년 이래 최저치인 6.8%를 기록해 독일 소비경기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 (수출) EU집행위원회와 IMF는 3.9%, 독일중앙은행은 3.2% 등 2011년 대비 수출 성장둔화세를 전망함 7.3%의 실업률을 예상함

21) 거시경제 봄 예측(2011.4), 독일정부 2012년 경제성장률 0.7%로 수정 발표함(2012.1)

<표 V-1> 독일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단위: %)

	EU 집행위원회		IMF		독일중앙은행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GDP 성장률	2.9	0.8	2.7	1.3	3.0	0.6
CPI ¹⁾	2.4	1.7	2.2	1.3	2.5	1.8
실업률	6.1	5.9	6.0	6.2	7.1	7.0
수출 ²⁾	7.8	3.9	8.6	3.9	8.3	3.2
수입 ²⁾	7.9	5.8	9.0	3.7	7.4	4.3

주: 1) CPI: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2) 수출/수입: 재화 및 용역에 해당

자료: EU 집행위원회: Economic Forecast, 2011.11

IMF: Economic Outlook, 2011.9

독일중앙은행: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2011.12

나. 재정전망

1) 세입 및 세출전망

□ 2011년 7월 독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2015년도 중기 재정계획이 의회 심의를 거쳐 당초 정부안(3,060억)에 비해 2억 유로 증가된 3,062억 유로로 확정

○ (재정수입) 2012년 신규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은 2,801억 유로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8.8% 증가한 규모

- 이 중 조세수입은 약 2,492억 유로이며, 전년 대비 200억 유로 증가

○ (재정지출) 2012년 재정지출은 3,062억 유로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0.1% 증가한 규모

○ (신규차입) 2012년도 신규차입은 약 261억 유로로 예상되며, 이는 2011년의 484억 유로는 물론, 당초 정부안 272억 유로에 비해 줄어든 규모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신규차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중기재정계획상 2015년까지 약 147억 유로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

<표 V-2>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2011~2015)

(단위: 10억 유로, %)

	2010	2011 (추정치)	2012 (예산안)	2012 (확정예산)	중기재정계획		
					2013	2014	2015
I. 재정지출	303.7	305.8	306.0	306.2	311.5	309.9	315.0
전년대비 증가율(%)	+3.9	+0.7	+0.1	+0.1	+1.8	-0.5	+1.6
II. 재정수입	303.7	305.8	306.0	306.2	311.5	309.0	315.0
조세 수입	226.2	229.2	247.4	249.2	256.4	265.8	275.7
세외 수입	33.4	28.2	31.5	30.9	30.2	25.4	24.6
신규 차입	44.0	48.4	27.2	26.1	24.9	18.7	14.7
III. 투자지출	26.1	32.3	26.4	26.9	29.7	29.5	29.3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11 bis 2015, 2011.7
BMF 월간보고서 2011.12

[그림 V-1] 독일 연방정부 재정수입 및 지출 추이

(단위: 십억유로)



자료: 독일 재무부, 2011.12
2) 독일정부 재정수지

-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독일 연방정부의 2012년 재정수지는 2011년과 비슷한 GDP대비 -1.0% 내외 수준
 - EU 집행위원회는 물론, 자국 내 경제연구소(IFO, KIEL) 모두 당분간 적자 재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2010년까지 GDP 대비 -4%대까지 악화되던 재정수지는 2011년 -1%대 수준으로 진입한 이후 점차 개선되는 추세

<표 V-3>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IFO	-3.2	-4.3	-1.1	-0.9	-
KIEL	-3.2	-4.3	-1.1	-1.1	-1.0
EU 집행위원회	-3.2	-4.3	-1.3	-1.0	-0.7

자료: IFO: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2011.12
 KIEL: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2011.12
 EU 집행위원회: Economic Forecast, 2011.11

3) 독일정부의 부채비율

- 독일정부가 예상한 2011년도 부채비율은 GDP대비 82%였으며, 2012년에는 81%로 1%p 하락할 것으로 전망

<표 V-4> 독일정부 총부채 규모(독일 재무부 전망)

(단위: GDP 대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독일 재무부	83.2	82	81	79.5	77.5	75.5

자료 : 수정된 안정화 프로그램(Deutschen Stabilitätsprogramms), 2011.4

- 독일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국외 기관들의 전망치 역시 2011년에

비해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IMF의 2011년 가을 전망에 따를 경우, 2012년 부채비율은 GDP대비 81.9%로 독일정부의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며, 2016년에는 75.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표 V-5> 독일정부 총부채 규모(IMF/EU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6
IMF	66.5	74.1	85.0	82.6	81.9	81.0	75.0
EU집행위	66.7	74.4	83.2	81.7	81.2	79.9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9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1.11

2. 예산기조

- 성장친화적 재정강화계획 실시 : 재정건전화를 넘어 경제성장과 재정안정의 두 가지 목표 동시 추구
- 2016년부터 부채제한법으로 인해 GDP의 0.35% 미만의 신규부채만 허용되므로, 계속된 긴축이 필요
 - 재정적자 감축 계획 하에 재정지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전년대비 0.1% 증가), 재정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시켜(전년대비 8.8% 증가) 재정적자를 전년대비 대폭 감소시킴
 - 구조적 신규차입 규모 감소를 위해 Top-down 예산 방식을 도입
 - 추가 수입 발생 시 우선적으로 신규부채를 감소시키는 새로운 부채제한 규정 마련

<표 V-6> 재정적자 감축계획

(단위: 억유로, %)

		2011	2012	2013	2014	누계	비중		
지출 감축	복지	30	70	94	109	303	531	37.1	64.9
	일반행정	23	33	39	39	134		16.4	
	기타(국방)	6	11	27	50	94		11.5	
세입 증대	감면축소	20	25	25	25	95	287	11.6	35.1
	항공세등 신설	33	53	53	53	192		23.5	
적자감축계획		112	192	237	276	817	100.0		

자료 : 독일재무부, 2010.6

- 보조금 감축, 인센티브 강화 등 성장지향적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세원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부문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중·소기업 및 중·소 소득층 중심의 세금감면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원전연료세를 부과하고 담배세의 점진적 인상 등 방안 마련
 -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설계하여 미래의 성장 잠재력 제고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2012년 재정수입 중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신규차입은 대폭 감소하여 총 재정수입은 3,062유로로 전년대비 0.1%증가
 -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2,801유로로 전년 대비 8.8% 증가
 - 조세수입은 총 2,492억유로로 200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309억유로로 전년 대비 27억유로 증가
 -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와 함께 은행부과금, 항공세 부과 등을 통한 수입 증대로 인해 재정수입 증가

- 신규차입은 261억유로로 '11년 대비 46% 감소

<표 V-7> 연방정부 2012년도 예산

(단위: 10억 유로, %)

	2010	2011 (추정치)	2012 (예산안)	2012 (확정예산)
I. 재정지출	303.7	305.8	306.0	306.2
전년대비 증가율(%)	+3.9	+0.7	+0.1	+0.1
II. 재정수입	303.7	305.8	306.0	306.2
조세 수입	226.2	229.2	247.4	249.2
세외 수입	33.4	28.2	31.5	30.9
신규 차입	44.0	48.4	27.2	26.1
III. 투자지출	26.1	32.3	26.4	26.9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11 bis 2015, 2011. 7
 BMF 월간보고서, 2011. 12

나. 세출

<표 V-8> 2012년 독일연방 부처별 예산현황

(단위: 10억 유로, %)

부처	2011	2012	증감률(%)
총리실	1.8	1.9	5.2
외교부	3.1	3.3	7.1
내무부	5.4	5.5	1.6
법무부	0.5	0.5	3.1
재무부	4.5	4.6	3.3
경제기술부	6.1	6.1	-0.1
농업/소비자보호부	5.5	5.3	-3.9
노동/복지부	131.3	126.5	-3.7
교통건설부	25.2	25.9	2.7
국방부	31.5	31.9	1.0
보건부	15.8	14.5	-8.2
환경부	1.6	1.6	-2.8
가족부	6.5	6.8	4.9
후진국지원부	6.2	6.4	2.6
교육부	11.6	12.9	11.1
연방부채	37.2	38.3	3.1
기타	11.0	13.3	20.7
합계	305.8	306.2	0.1

자료: 독일재무부, Gesamtplan des Bundeshaushaltsplans 2012

- 이번 예산안은 투자, 사회안정, 교육 그리고 연구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는 연방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었는데 사회안정을 위해 총 2,300만유로, 특히 특수 비행감시장비 설치를 위해 1,640만유로 투자 예정
- (노동 및 복지) 독일 연간 예산에서 중 가장 큰 비중(41.3%)을 차지하는 분야로 전년대비 3.7% 감소한 1270억 유로를 배정함
 - 연금공단에 8백억 유로 지원

- (연방부채)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12.5%)로 전년대비 3.1% 증액된 383억 유로 책정
 - 1조 3천억 유로의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로 8백억 유로가 지출될 예정

- (국방부) 총 320억 유로가 배당되어 애초 예상보다 1억9천만 유로가 늘어났으며 이는 2011년 지출과 비교하면 3억 유로가 증가
 - 의병제 중단을 포함한 국방개혁을 통해 2011~2015 83억 유로를 긴축할 예정

- (교육 및 연구) 2012년 예산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30억 유로로 책정되었으며, 2013년까지 총 120억 유로가 증가할 예정
 - 연방 경제기술부의 주도 하에 에너지 연구와 효율성 증진에 대해 각각 1억 5500만 유로, 300만 유로를 책정
 - 중소기업 혁신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 2011년보다 1억 유로가 증가한 약 5억 유로를 책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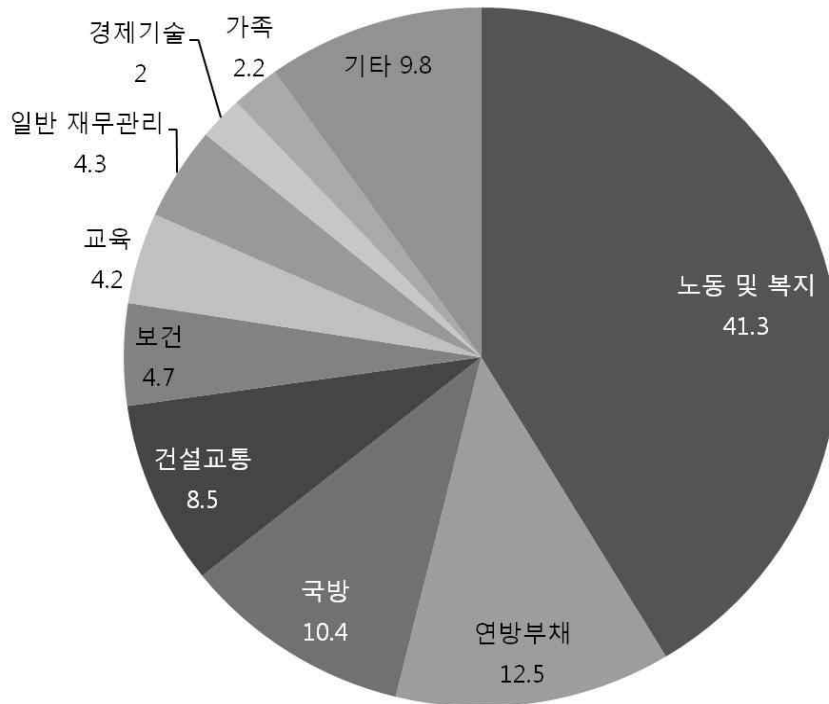
- (건설교통) 교통부로 건설 및 도시계획에 260억 유로의 예산을 집행
 - 인프라구조 투자에 10억 유로를 그리고 연방도로 보수 및 개설에 6억 유로를, 철도사업에 1억 유로를 증액

- (내무) 2012 내무부 예산은 총 55억 유로가 배정
 - 사이버 IT 보안 프로그램, 아프간 경찰 훈련 및 테러 위협 방지책 등에서 추가로 4,750만 유로가 지출될 예정

- (환경) 예산계획보다 1억1600만 유로 적은 약 16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환경, 자연보호 및 원자력발전소 안전을 위한 기금이 15억7,800만 유로로 책정됨

[그림 V-2] 독일 연방정부 2012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자료: 독일 재무부, 2011.11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관련

- 연방재무장관 및 각 주 경제장관으로 구성된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는 2011년 12월 1일 예산평가와 관련 제4차 회의를 개최함
 - 안정화위원회는 부채제한법 준수와 영구적인 신규 차입 감소를 위해 재정 건전화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필수 요소로 안정적인 세금 정책을 언급함
 - 정기적인 예산 감시의 일환으로 안정성위원회는 연방의 예산 상황과 평가 지표분석을 통해 각 주의 재정 상태를 평가함
 - 안정화위원회의 평가위원회가 제공한 평가기준에 재정위기 경고를 받은 4개 주(베를린, 브레멘, 자를란트와 슐레스비히 홀스타)가 동의함

- 프로그램은 재정 회복을 위해 2012년부터 2016까지 적용되며, 대상이 되는 주는 매년 신규차입 감소 규모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해야함

나. 특별예산: 에너지 및 기후 기금

- 에너지 및 기후 기금 : 당초 원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의 수익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원 및 재생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
- 독일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전력 실질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 기 위해 '에너지 전환' 진행 중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폐쇄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정 및 제정 법안 8개가 최종 승인됨(2011.6.30)
 - "환경 친화적이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구"라는 제목의 제 6차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이 채택됨(2011.8.3)
- 현재는 원전연료세의 수입으로 운영되나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연간 약 33억 유로의 수입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원전폐쇄와 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할 예정
 - 현재 운영 중단 중인 8기의 원전은 즉시 폐쇄하고, 이외 나머지 9개의 원전 역시 2015~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
 - 에너지효율이 높고 탄력적 가동이 가능한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향후 4년간(2013~2016) 기금 연간 지출의 5% 한도 내에서 지원함 (2011.7.13)
 - 2013년에는 1.67억 유로, 2014년에는 1.64억 유로를 지원
 - 재생에너지 개선정책을 통해 '2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현 17%에서 35%, '50년 80%로 확대
 - 기후보호 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 대비 80-95% 감축

<표 V-9>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단위: 억 유로)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출	3	7.8	33.3	32.7	32.2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11 bis 2015, 2011.7

다. 기타

- 기민연(CDU), 기독교사회당(CSU), 자민당(FDP)이 세금인하, 양육지원금 인상, 사회보장보험 분담금 인상, 고능력 취업 이민의 간소화 및 교통 시설 투자 등에 관해 합의
- 2013~2014년에 걸쳐 소득세 면세점을 8,354유로로 인상하는 동시에 부유세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
 -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2014년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매달 20유로에서 25유로 플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자민당 당비서 린드너와 연방 경제장관 뢰슬러는 조세감면으로 인해 늘어난 가계수입은 국내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
 - 총 조세감면 규모는 2013년 20억 유로, 2014년 약 40억 유로로 추정되며, 유로 존 위기와 더불어 높은 국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에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음
- 양육지원금 인상, 사회보장보험 분담금 인상, 고능력 취업 이민의 간소화에 관해 합의함
 - (보험료율 인상) 치매환자 간병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보험율이 0.1%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약 10억 유로의 수입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양육지원금 인상) 2013년부터 만2세 유아를 탁아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돌볼 경우 100 유로의 보조비를 그리고 2014년에는 3세 아동도 150 유로의 보조비를 지원

- (이민자 지원) 이민자들의 독일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금까지 지원기준을 소득액 66,000유로에서 48,000유로로 인하
- (교통시설 투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조 개선에 약 10억 유로의 신규투자 계획